

국민의당 당권주자, 8·27 전당대회 앞두고 '정체성 논쟁'

'극중이나, 개혁이나' 노선경쟁 돌입

'바른정당과 연대' vs '민주와 한뿌리'...정개개편론 촉각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이 6일 당의 정체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핵심은 '중도 제3세력 형성'을 위한 바른 정당과의 연대에 방점을 둘지, '개혁노선'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거리를 좁힐지를 놓고 한바탕 결전이 예상된다.

여기에 호남 주자와 비호남 주자 간 대결 양상도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극중(極中)주의' vs '진보·개혁'=국민의당 당권경쟁은 출마를 공시화한 안철수 전 대표,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과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4파전 양상이다.

이들 4명은 '양 극단이 아닌 세력 가운데 개혁에 뜻을 함께하는 제3세력을 만든다'는

점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각각의 차이를 드러낸다.

안 전 대표는 '극중주의'를 화두로 던졌다. 좌우 이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철저히 개혁노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대변되는 양당 체제 극복이 지상과제다.

대표적인 중도론자로 거론되는 김 전 대표 역시 이러한 '제3세력 중도노선'을 최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전 전 대표나 정 의원의 경우에는 '개혁세력 형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천 전 대표는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이 나아가길 같은 개혁노선"이라고 말했다.

천 전 대표는 "보수도 개혁적인 입장을 가진 분야라면 얼마든지 같이 할 것"이라면 시도 "하지만 한국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와는 거리가 멀고 바른정당도 기대에 못 미치는"이라며 지금의 보수진영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정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당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며 "민주당과 개혁의 경쟁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과 연대' vs '민주와 한뿌리'=당권주자들의 노선경쟁이 정개개편의 불씨로 작용할지도 관심이다.

정가에서는 "바른정당과 손을 잡는 것이냐", "민주당과 다시 거리를 좁히는 것이냐"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극중주의' 노선은 바른정당과의 연대로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당체제 극복을 위해 바른정당과 손을 잡고서 '제3세력 블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개혁주의' 노선이 힘을 얻을 경우 민주당과 '개혁블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애초 한 뿌리"라면서 "각종 개혁입법에서 노선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극중주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연결될 것", "개혁노선을 주장하는 세력은 결국 민주당과 다시 합치려 할 것"이라는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연이어 나온다.

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도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안 출마는 구태정치 몰염치의 극치"

천정배 의원 "진심을 이용한 '갑질의 정치'" 비판



당권 경쟁 나서는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사진)은 안 전 대표가 8·27 전당대회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6일 "구태 중의 구태정치로, 누을 자리, 누워서 안 될 자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몰염치,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장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 결석이 된 당대표 자리를 채우는 보결선거에서, 바로 그 대선 패배에 대해 무책임을 저야 하는 대선 후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패배 후 안 전 후보에게 충분한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를 비롯한 거의 모든 당원이 그의 출마를 말했으나 결국 안 전 대표의 뜻대로 출마선언이 강행됐다"며 "자신과 생각이 다르니 설득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불통'이고 '아집'이고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또 "거의 모든 당원들이 안 전 후보의 출마선언에 의아해하거나, 자칫하면 안

전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당원들을 격정시키고 당원들을 막다른 선으로 내모는 '합박의 정치'이며, 사랑하는 사람의 순수한 마음, 더 많이 사랑해 줄(乙)의 처지일 수밖에 없는 진심을 이용하는 '갑질의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안 전 대표가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안 전 후보가 생각하는 소통의 대상에 호남은 있느냐, 호남은 안 전 후보에게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냐, 극복과 배제의 대상이냐"고 반문했다.

천 의원은 "안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 로 요구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다.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것을 거듭 요구한다"며 안 전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재차 요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선관위, 초·중 교원 대상 민주시민교육과정 직무 연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정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교 5일 밝혔다.

이번 교원연수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돼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향상 과정으로 광주전남 교원 38명이 참가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학교선거의 관리 및 절차, 강의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 우리나라 선거 및 정치제도의 이해, 토의·토론수업 운영기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교원 직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광주선관위는 교원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올바른 선거·정치문화 정착을 위한 성공적인 연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원 연수의 성공적인 추진을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기관으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김대중 평화캠프 개막 김갑성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이해동 조직위 명예위원장, 박지원·이계호·설훈·최경환·김한길·김원욱 국회의원, 김홍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5일 2017년 김대중 평화캠프 개막식에서 추모시화전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 與 법개정 발의

복지부 "사회적 합의로 결정"...입법화 과정 난항 겪을 듯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가 법적 으로 국민연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사업을 복지부 장관이 관장,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선택 찬성 입장을 보이지 않아 난항을 예고했다.

국민연금과는 달리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은 관련 법률로 국가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그간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논의와 법안은 끊임없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좌절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8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내다봤고,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2060년을 고갈 시점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80년 해직언론인 특별조치법안' 발의

설훈 "5·18 해직언론인 국가배상 피해구제 선행돼야"



1980년 신군부에 의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 취재검열에 불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불법감제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의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은 5·18해직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의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한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법안은 지난 2010년 1월 진실·화해를위 한고사정리위원회가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대해 국가는 언론자유 침해와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권고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9년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언론사보다 강제해직된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배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언론인 또는 그 유족을 대상으로 피해배 상을 하도록 했다.

법안의 주요 대상은 1980년 5월 당시 광

주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보도할 수 없어 일주일 간 신군부의 검열을 거부하고,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신문·방송·통신 제작 거부로 앞장 서 강제해직된 언론인이다.

설 의원은 "5·18 광주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5·18정신을 헌법 정신에 담겠다고 약속한 만큼 아직 해결되지 않은 5·18 피해구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옳은 일을 하고 난을 겪었는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역사는 퇴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정권에 부여했던 사주와 간부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당시 해직언론인들은 생활고와 역경 속에 30여년을 지내왔다"며 "이것이 지난 9년간 언론 해직 문제, 언론 적폐까지 이어진 것이고, 5·18 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통과가 적체 청산이자 과거사 바로잡기"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트렌드를 앞서가는 고품격 웨딩!!

웨딩을 디자인 하세요

j-artwedding.com

소중한 날, 가장행복한 추억을 선물하고픈 J-ART WEDDING 제이아트웨딩컨벤션

"고객님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약속, 세심한 서비스"

우아하고 심플한 공간 / 최고의 품격 / 격조높은 행복한 추억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제이아트웨딩에서 신랑, 신부의 특별한 순간이 펼쳐집니다.

문의전화 062)369-5200
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차로 263
버스이용시 서광주역 하차 -36,46,73,17,75